

5
May 2018
No.7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리더칼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 김석

이슈진단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변경에 따른 전문건설기업의 체질 개선

연구원소식

건설산업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인사발령 알림

발간물안내

신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방안 조사연구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상생과 화합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 김 석



반갑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 김석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곳곳이 국가경제에 기여해 오신 전문건설인 모두 초록숲처럼 행복하고 힘찬 출발로 앞날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건설경기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과 민간주택건설 물량 증가로 다소 활기를 띤 가운데 대구 전문건설업체의 실적이 2조 8천여억원을 기록한 것은 괄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 및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관세 대응 등 국제경기에 민감한 우리나라 경제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새정부들어 국내 건설경기는 SOC 예산 감소,

부동산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칙흑 같은 밤을 보내야 하고, 해 뜨기 직전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인들의 굳건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으로 시대적 변화에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대구시회는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원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 무등록 시공근절, 불공정 하도급 해소, 회원사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및 분리발주 활성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민간발주 및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무등록 시공 근절 등 전문건설 업역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종별 간담회 및 회원 친목활동을 강화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토록 회원사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협회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간다면 회원사가 절실히 바라는 바를 하나씩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의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전문건설업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산업의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정책 연구원에서는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현장의 현실이 정부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제시와 정책건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한, 전문건설인 여러분께서도 특허 및 신기술 개발, 자기만의 특화된 노하우(Know-how)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문건설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협회를 중심으로 단결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조재용

선임연구원 (adelid83@ricon.re.rk)

4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공사 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② 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0조원 규모의 실내건축·창호공사 시장에서는 2017년 피해 상담 건수가 5,000건에 이르고, 부실공사에 인한 하자발생이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분쟁이 감소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 중의 한가지인 무허가 업체 시공 근절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재용

선임연구원 (adelid83@ricon.re.rk)

지난 1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 외 10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중에 있다.

개정안은 건설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이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은 현장별 보증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29조의 제1항부터 3항까지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7년 이내에 재위반시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즉 7년간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등록말소 인 것이다.

전기공사법과 정보통신공사법에서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전기공사법에서는 제28조 제8항, 정보통신공사법 제66조 13항). 동일한 내용의 위반에 대하여 건설업만이 처분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도급 관련 상습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재위반(투 스트라이크) 시 등록말소(아웃) 처분의 기준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와 동일하게 5년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변경에 따른 전문건설기업의 체질 개선

홍 성 호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실장(hsh3824@ricon.re.kr)

사회적 가치변경에 따른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물살이 전문건설기업에게도 휘몰아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이 사회적 중심 가치로 자리 잡음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최저임금도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인 건설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기준도 근로일수 월 8일 이상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는 97년 외환위기, 08년 세계금융 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전문건설기업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하면서 사전에 약속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과 장비 투입이 불가피하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 각종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오롯이 최저입찰제로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기업에게 전가될 것이다. 또한 건설 근로자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추가 투입할 인력의 공급도 여의치 않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건설현장은 심각한 인력 부족현상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외국인 노동자(E-9 비자)를 제외하고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시중 노임이 현행 최저임금(8시간 기준 6만 240원)보다 높아 전문건설기업에 미칠 영향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포괄

임금제(기본급 이외에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미리 반영하는 급여 방식)를 제한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중 노임도 동반 상승할 소지도 있다.

월 근로 8일 이상으로 건설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확대될 경우, 보험가입을 기피하기 위해 7일씩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도는 건설 근로자들이 많아져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전문건설기업은 장기고용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근로자분 보험료도 대신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동환경 변화는 결국 전문건설기업의 공사비(노무비)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변화도 필요하지만, 노동생산성 향상 등 전문건설기업의 체질개선도 동시에 요구된다. 그동안 전문건설기업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거나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근로시간 연장, 추가 인력 고용이 힘든 상황에서 경쟁력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건설기업의 건설 근로자 운용도

|이슈진단

각종 근로기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효율성을 적극 모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워라벨이 사회적 중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건설기업은 노동환경의 변화를 성장통(成長痛)으로 인식하고 회피하기보다는 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질적 변화가 있는 전문건설업을 기대해 본다.



건설산업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5월 24일, 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업계·학계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건설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김영윤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유대운 이사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대한건축학회 이현수 회장(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 등의 해결과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안연구를 적극 수행할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인사발령 알림

우리 연구원은 5월 11일(금)에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 연구실장 인사발령

▲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박승국 ▲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박선구 ▲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홍성호

- 연구기획위원 인사발령

▲ 산업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종광

신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방안 조사연구



2016년 11월 4일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 정부는 자발적 감축목표(INDC)로 제시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37%의 감축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내 역시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설한 이행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억제하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화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변화협약 대응 주요 건설산업을 에너지, 도시, 건물, 도로, 안전, 장비 및 자재 부문으로 분류하여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로 건설되어야 한다. 기존의 육상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등 대규모의 토지를 사용하는 건설사업보다 저수지나 바다를 이용한 수상·해상 발전소의 건설 확대가 필요하다.
- 둘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의 대규모 발전시설보다는 소규모 발전시설을 다양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력 생산의 효율성 및 저장·송전 기술의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 셋째, 지역별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선정하고, 생산되는 에너지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목표를 선정하고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가이드를 수립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넷째,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에너지 저감 및 생산 전략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의 패시브 및 액티브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도로, 하수처리장, 수도관로 등 기반시설을 활용한 액티브 기술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섯째,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설물별 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며, 시설물별 에너지 정보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여섯째, 건설산업의 세부공종(전문업종)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관리와 연계되는 실내건축,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등의 공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건설사업의 전략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토공, 도장, 철근·콘크리트, 포장 등의 공종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재 및 장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일곱째, 기후변화 대응 건설산업에 대한 업계 실무자의 교육·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것이다.

주요 건설산업에 대한 세부전략 및 촉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각각의 건설주체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목표에 맞춰 협력해 나아갈 때, 비로소 기후변화 대응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TEL: (02)3284-2600(대) FAX: (02)3284-2620 <http://www.ricon.re.kr>

발행일 2018년 5월 발행(71호)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편집 경성문화사